



산업동향 [www.kcca.or.kr](http://www.kcca.or.kr)



- 올 상반기 수출 사상 최대!
- 민간 고용 확대...7월 취업자 47.3만명 ↑
- IMF “한국경제, 올해 5.7% 성장”
-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제도) 현황조사 결과
- 문화접대비 도입후, 3년간 기업 문화접대 11배 증가
- 기준금리 인상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조사결과
- 최근 환율변동 및 유럽발 재정위기에 따른 수출중소기업 애로조사결과
- 납품가 인하요구 혈값에 달리는 것
- 기준금리 동결 불구 인상압력 ‘여전’
- 중기청, 상반기 중소기업 46조3000억 구매
-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방안 ‘붓물’

## 올 상반기 수출 사상 최대!

상반기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40.0% 증가한 2,035억 달러, 무역수지는 19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올 상반기 품목별 수출 증가세를 보면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요 품목이 중국 등 신흥국 수출 확대로 2004년 상반기(38.4%) 이후 최대 증가세(35.0%)를 보였다.

반도체의 경우 PC, 스마트폰 등 고성능 제품의 출시 확대와 단가 상승으로 시장점유율이 확대됐다. 자동차도 대형 차종을 중심으로 수출 호조세를 보였다. 선박은 2008년 이후 신규 발주량이 감소추세를 보였고, 일부 발주 선박의 계약취소 등에도 불구하고 수주 물량 인도로 수출이 다소 증가했다. 반면 무선통신기기는 스마트폰 출시에 따른 기존 휴대폰의 수출단가 하락 등으로 수출 감소세를 보였다.

수입의 경우 원유 등 원자재 분야와 반도체 제조장비 등 자본재 분야의 증가로 2000년 상반기(44.7%) 이후 최대 증가세(40.0%)를 기록했다.

※ 경기 호황, 3분기에도 지속 전망 : 제조업 BSI 113...반도체는 151로 최고치 기록

또한, 올 3/4분기에도 경기 호조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와 산업연구원이 6월 1일부터 25일 까지 온라인을 통해 614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조업기업 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3/4분기 경기전망치는 113으로 나타났다.

지수가 100이면 前분기와 동일하며 100보다 크면 호전, 작으면 악화를 의미한다.

각 분야별 BSI 지수를 살펴보면 매출은 115, 내수 111, 수출 109, 설비투자 108, 고용 108로 모두 기준치인 100을 상회했다.

업종별로 보면 전 업종이 100을 넘는 가운데 반도체가 151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 뒤를 정보통신(124), 섬유(118), 전기기계(115), 전자(115) 등이 이었다.

경상이익도 조선(90)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에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 민간 고용 확대...7월 취업자 47.3만명! "8월 취업자도 30만명 후반대 증가세 지속될 것"

경기 개선에 따른 구인수요로 민간부문 취업자수가 2002년 4월 이후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7월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47만3,000명 증가하는 등 견조한 회복세를 이어갔다.

기획재정부는 8월에도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30만명 후반대의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11일 통계청의 2010년 7월 고용동향을 분석한 자료에서 지난 해에 비해 정부 일자리사업 규모가 축소됐지만 민간 고용이 크게 개선되면서 고용 회복세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신규 취업자는 2,430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7만3,000명 증가했다. 특히 민간부

문 취업지수는 2002년 4월 이후 최대 규모인 65만 8,000명 증가를 기록하며 고용 회복세를 주도했다.

재정부는 "제조업 가동률이 80%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투자가 확대되고 민간 소비도 꾸준히 증가하는 등 고용 회복 기반이 강화됐다"고 밝혔다.

워크넷을 통한 구직자 1인당 구인 일자리 비율도 60%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민간 기업의 구인 수요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은 지난해 하반기 대규모 추경 일자리 사업에 따른 지저 효과가 지속되면서 취업자수가 18만 5,000명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돼 민간 비농림어업 취업자가 69만8,000명 증가하며 2002년 7월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제조업 취업자는 수출, 내수 등 경기회복에 따라 광공업 생산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23만8,000명 증가했다. 이는 2000년 8월 이후 최대 규모다.

서비스업 취업자는 도소매·음식숙박업 취업자 감소폭이 크게 축소된 가운데 보건·복지, 사업지원, 전문과학기술 등 유망 업종 중심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상용직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돼 고용의 안정성도 높아지고 있다. 상용직은 지난 3월 이후 전년동월대비 70만명 이상의 증가세가 지속됐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비중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20대 인구 감소에 따라 20대의 취업자

가 감소했지만 감소폭은 축소됐다.

취업자 증가에 따라 고용률은 59.8%로 전년동월 대비 0.4%p 상승했다. 그러나 경기회복에 따라 구직 활동이 증가되면서 실업률은 전년동월과 같은 3.7%를 유지했다.

한편 재정부는 "8월에도 공공부문 일자리 감소에도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30만명 후반대의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고용회복세가 지속돼 서민들의 체감 경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하반기에 계획된 공공일자리 사업을 차질없이 실시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 02-2150-2812)

## IMF “한국경제, 올해 5.7% 성장”

…4월 전망보다 1.2%p 높여

국제통화기금(IMF)은 8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5.7%로 전망했다. 이는 두 달 전 전망치보다 1.2%포인트 높은 것이다.

영국, 프랑스 등이 하향 조정된 가운데 상승 조정 폭으로서는 주요 20개국(G20) 중 브라질 다음으로 한국의 전망치가 크게 올라갔다.

이는 정부가 올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밝힌 공식 전망치 5.8%와도 비슷한 수치다.

IMF는 이날 ‘세계경제전망’ 수정치를 통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지난 4월 전망치(4.2%)보다 0.4%포인트 높은 4.6%로 상향조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IMF는 지난 4월에 발표한 세계경제전망보다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된 수치를 내놓은 가운데 한국의 성장률을 높게 인상시켰다.

지난 4월 전망에선 올해와 내년 각각 4.5%와 5.0%로 밝혔지만 이번 수정 전망에선 올해 성장률을 5.7%로 1.2%포인트 높였다. 내년 성장률은 5.0%를 유지했다. 지난 6일 과천청사에서 한국경제에 대한 협의결과를 발표한 IMF 미션팀은 "한국 경제는 2009년초 이후 정책당국의 부양적 거시경제 정책 및 금융정책, 세계 무역의 정상화 기조에 힘입어 놀라

운 속도로 회복해왔다"며 성장률 상향조정 이유를 밝혔다.

IMF는 브라질의 성장률을 1.6%p 높였고 나머지 중국, 인도, 일본, 미국, 캐나다의 성장률 조정폭은 0.1%포인트~0.6%포인트 정도였다.

유럽의 경우 경기 회복세가 더디다는 점을 반영해 전망치를 낮추거나 소폭 상승시켰다.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 성장률 전망치가 각각 -0.1%포인트 낮아졌으며 독일과 이탈리아, 스페인은 4월 전망치가 유지되거나 0.1~0.2%p 상향하는데 그쳤다.

(단위 : %)

| 구 분   | 2009<br>(실적치) | 2010         |              |              | 2011         |              |              |
|-------|---------------|--------------|--------------|--------------|--------------|--------------|--------------|
|       |               | 10.4월<br>(A) | 10.7월<br>(B) | 조정폭<br>(B-A) | 10.4월<br>(C) | 10.7월<br>(D) | 조정폭<br>(D-C) |
| 세 계   | △0.6          | 4.2          | 4.6          | 0.4          | 4.3          | 4.3          | -            |
| 선진국   | △3.2          | 2.3          | 2.6          | 0.3          | 2.4          | 2.4          | -            |
| 유로    | △4.1          | 1.0          | 1.0          | -            | 1.5          | 1.3          | △0.2         |
| 신흥개도국 | 2.5           | 6.3          | 6.8          | 0.5          | 6.5          | 6.4          | △0.1         |
| 주요국가  |               |              |              |              |              |              |              |
| 브라질   | △0.2          | 5.5          | 7.1          | 1.6          | 4.1          | 4.2          | 0.1          |
| 캐나다   | △2.5          | 3.1          | 3.6          | 0.5          | 3.2          | 2.8          | △0.4         |
| 중국    | 9.1           | 10.0         | 10.5         | 0.5          | 9.9          | 9.6          | △0.3         |
| 프랑스   | △2.5          | 1.5          | 1.4          | △0.1         | 1.8          | 1.6          | △0.2         |
| 독일    | △4.9          | 1.2          | 1.4          | 0.2          | 1.7          | 1.6          | △0.1         |
| 인도    | 5.7           | 8.8          | 9.4          | 0.6          | 8.4          | 8.4          | -            |
| 이탈리아  | △5.0          | 0.8          | 0.9          | 0.1          | 1.2          | 1.1          | △0.1         |
| 일본    | △5.2          | 1.9          | 2.4          | 0.5          | 2.0          | 1.8          | △0.2         |
| 한국    | 0.2           | 4.5          | 5.7          | 1.2          | 5.0          | 5.0          | -            |
| 멕시코   | △6.5          | 4.2          | 4.5          | 0.3          | 4.5          | 4.4          | △0.1         |
| 러시아   | △7.9          | 4.0          | 4.3          | 0.3          | 3.3          | 4.1          | 0.8          |
| 스페인   | △3.6          | △0.4         | △0.4         | -            | 0.9          | 0.6          | △0.3         |
| 영국    | △4.9          | 1.3          | 1.2          | △0.1         | 2.5          | 2.1          | △0.4         |
| 미국    | △2.4          | 3.1          | 3.3          | 0.2          | 2.6          | 2.9          | 0.3          |
| EU    | △4.1          | 1.0          | 1.0          | -            | 1.8          | 1.6          | △0.2         |

(문의 : 기획재정부 IMF팀 02-2150-4841)

##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제도) 현황조사 결과

□ 중소기업중앙회는 노조가 있는 중소기업 303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현황 조사」결과, 단체협약을 새롭게 체결한 중소기업 중 83.3%가 현행 노조전임자수를 그대로 '유지' 하였고, 단체협약을 아직 체결하지 않은 중소기업 80.5%도 노조전임자수가 '현행과 변함없을 것' 이라고 전망하였다.

-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의 '완전' 전임자수는 (종전) 0.99명→ (이후) 0.83명, '부분' 전임자수는 (종전) 0.83명→ (이후) 0.71명으로 노조전임자수가 다소 감소하였고, '완전' 전임자가 있는 사업장은 68.1%에서 63.9%로 감소한데 반해, '부분' 전임자가 있는 사업장은 44.4%에서 47.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을 계기로 완전전임자수가 감소하거나, 완전전임자가 파트타임근로시간면제자로 전환되는 등의 변화를 보이고 있었다.

-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한 중소기업 중 91.7%의 사업장이 정부에서 고시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그대로 적용' 하고 있었고, '한도 미만' 으로 결정할 사업장은 8.3%에 불과하였다.

- 한편,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을 계기로 노조전임자에게 그동안 관행처럼 지급되어왔던 차량·유류비·통신비 등의 '추가지원을 중단' 한 사업장이 70.8%였고, '향후 중단하겠다' 는 사업장은 62.8%로 조사되었다.

- 단체협약을 아직 체결하지 않은 중소기업 71.4%가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하기 위한 노사협상이 '원만' 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으나, '한국노총' 소속 중소기업의 70.5%가 '원만' 할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민주노총' 소속 중소기업은 27.3%에 불과하였다.

-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중소기업들이 근로시간면제제도 결정이 어려울 것 같은 이유로 '노동부 업무 매뉴얼이 모호하여 법 해석을 둘러싼 갈등' (27.7%)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다음으로 '3개월 자동 연장 협정이 있거나 단체협약 만료일이 남아 있으므로 주변 기업의 사례를 참조하여 노사 협상을 진행' 26.0%, '근로시간면제 업무범위를 둘러싼 갈등' 20.8%, '노조가 근로시간면제 상한을 초과한 과도한 요구' 11.3%, '노조전임자수 유지·증원 요구' 10.4% 순으로 조사되었다.

-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중소기업들이 예상하는 노조의 편법요구 유형으로는 '근로시간면제 대상 이외의 업무(예, 사업장 밖의 노조 활동, 과업준비활동 등)를 유급으로 인정요구' 가 32.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별도수당 또는 임금인상률에 노조전임자 급여 포함' 26.0%, '부서소속으로 배치된 실제근무는 하지 않으며, 종전 유급 노조전임자의 지위 유지' 19.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노조의 편법요구에 40.3%의 중소기업이 '노조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겠다' 고 밝혔지만, 58.0%가 '상황을 봐서 결정하겠다' 고 응답하였고,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겠다' 는 응답이 1.7%였다.

- 단체협약이 '만료' 된 119개 사업장 중 40.3%(48

개)가 단체협약을 새롭게 '체결' 하였고, 단체협약 '만료기간이 남음' 166개 업체 중 14.5%(24개)가 단체협약 만료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 한 것으로 나타났다.

○ 중소기업중앙회 백양현 인력지원본부장은 “중소기업 노조에 대해서는 사실상 기존 노조전임자를 그대로 인정하는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부여함에 따라, 대규모 사업장의 전임자수는 대폭 줄어드는데 반해, 대다수 중소기업은 현행 노조전임자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중소기업에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비용부담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근로시간면제한도는 정부에서 고시한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9명에 불과한 사업장도 조합원 50명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면제한도 상한인 1,000시간을 적용하는 등 실제 노조업무량과는 상관없이 근로시간면제한도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며 “향후 근로시간면제한도 축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문화접대비 도입후, 3년간 기업 문화접대 11배 증가

□ 문화예술서비스산업의 지원 및 건전한 접대문화 조성을 위해 2007년 도입한 문화접대비 제도로 지난 3년 동안 기업의 문화접대비가 1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접대비 제도는 문화접대비가 총 접대비의 3%를 초과할 경우 접대비 한도액의 10%를 한도로 추가 손금 산입하는 제도로 문화예술의 수요 창출을 통한 문화예술서비스산업 육성과 건전한 접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2007년 제정되었으며, 문화접대는 공연예술, 운동경기관람, 도서구입, 관광축제 입장권 등 문화·체육·관광에 걸쳐 광범위한 범위를 포함하고 있다.

□ 중소기업중앙회가 문화접대비 도입 3주년을 맞이하여 100개업의 회계장부 분석과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문화접대비에 대한 인식조사를 병행 실시하여 발표한 「문화예술 활용 확대를 위한 문화접대비 세제 효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의 접대비는 주로 유흥, 음식점, 운동, 관광, 물품, 문화, 경조사비, 화환, 현금 등으로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09년 접대비의 지출내역을 보면 유흥이 50.07%로 가장 많았고, 식사 24.28%, 물품 8.17%, 운동 4.83%, 문화 0.57%로 나타났으며, 문화접대비는 전체 접대비의 1.7%에 불과하였다.

○ 그러나 1개 기업당 평균 문화접대비 비중을 보면 2006년 0.05%에서 2009년 0.57%로 11배가 증가하여 문화로 접대하는 기업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접대비를 증가한 이유로는 'CEO의 문화에 대한 많은 관심과 기업의 문화적 이

【2009년 접대비 지출 금액】

(단위: 천원)

| 구분    | 유흥        | 식사        | 운동      | 관광    | 물품      | 문화     | 기타      | 합계        |
|-------|-----------|-----------|---------|-------|---------|--------|---------|-----------|
| 2009년 | 2,286,228 | 1,153,718 | 204,644 | 7,295 | 355,637 | 77,498 | 372,073 | 4,457,093 |

**【기업 당 접대비 지출 비중】**

(단위 : %)

| 구분    | 유흥     | 식사     | 운동    | 관광    | 물품     | 문화    | 기타     | 합계   |
|-------|--------|--------|-------|-------|--------|-------|--------|------|
| 2006년 | 44.09% | 21.12% | 8.43% | 0.15% | 14.29% | 0.05% | 11.87% | 100% |
| 2007년 | 42.76% | 19.52% | 6.91% | 0.18% | 14.88% | 0.22% | 15.53% | 100% |
| 2008년 | 41.94% | 22.21% | 9.97% | 0.05% | 16.37% | 0.22% | 9.23%  | 100% |
| 2009년 | 50.07% | 24.28% | 4.83% | 0.12% | 8.17%  | 0.57% | 11.96% | 100% |

※ 각 기업의 접대비 비중의 평균치

미지 제고'를 위해서라는 답변이 많았다.

○ 문화접대 분야는 문화예술 공연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도서, 전시, 스포츠관람 등으로 나타났다.

□ 중소기업중앙회 이원섭 문화경영지원센터장은 “지난 2007년 문화접대비 제도 도입 이후 ‘문화로 인사합시다’ 캠페인을 펼치면서 외부바이어에게 공연 티켓을 선물하고, 직원들에게 책을 선물하는 등 문화접대가 많이 늘었으나, 문화접대비제도

**【분야별 문화접대비 지출 금액】**

(단위 : 원)

| 구분    | 공연         | 도서        | 전시      | 스포츠관람   | 기타        | 합계         |
|-------|------------|-----------|---------|---------|-----------|------------|
| 2008년 | 15,104,386 | 1,395,700 | 86,000  | -       | 67,500    | 16,653,586 |
| 2009년 | 65,506,807 | 8,165,363 | 800,000 | 350,000 | 2,676,000 | 77,498,170 |
| 증감액   | 50,402,421 | 6,769,663 | 714,000 | 350,000 | 2,608,500 | 60,844,584 |

□ 문화접대비 제도가 접대문화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는 기업은 30.2%이며, 그저 그렇다는 기업이 39.6%,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기업이 30.5%로 조사되었다. 또한, 문화접대비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행 제도의 개선’이 우선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49.2%로 나타났으며, 또한 담당 세무사 및 CEO들의 54.6%가 접대비의 3% 초과 항목을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50.4%는 접대비 한도의 10% 범위라는 제한선을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의 제한 요건과 2011년 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여서 많은 기업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 “제도적 유인장치를 마련한다면 기업이 문화예술을 활용하여 문화경영기업으로의 인지도도 높이고, 문화예술계도 활성화 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다”고 밝혔다.

## 기준금리 인상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조사결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41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준금리 인상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최근 경제지표의 호전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당수 기업은 기준금리 인상(2.0%→2.25%)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로 기업경영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경제지표 호전에 대한 체감 여부에 대해 체감하지 못한다 (67.4%) 응답비율이 체감한다 (32.6%) 응답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감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65.1%)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중소기업 2곳 중 1곳(49.4%)은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2.0%→2.25%)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로 기업경영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특히, 부채비율 150%이상 기업이 57.0%로 150%미만 기업의 46.4% 보다 높게 나타나 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조선기자재, 금속가공제품 등 장치산업과 식료품 등의 업종이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 하반기 자금수요 전망에 대해서는 상반기 보다 “증가할 것”이라는업체가 43.5%로 감소할 것이라는 업체 14.9%보다 높게 나타나, 향후 추가 금리 인상시 중소기업들의 경영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 한편, 금리인상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경영효율성 추구를 통한 원가절감 (49.1%)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차입금 상환 등을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 (25.1%) 신규채용축소 및 인력감축 (14.3%), 투자규모감소 (11.5%) 순으로 나타났다.

○ 2010년 말 중소기업이 바라는 기준금리의 적정 수준은 2.0% 응답비율이 48.9%, 2.25% 응답비율이 29.7%로 나타나, 대부분 현재수준(2.25%) 이하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환율변동 및 유럽발 재정위기에 따른 수출중소기업 애로조사결과

최근 수출중소기업은 환율인상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54.2%)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수출중소기업 10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환율변동 및 유럽발 재정위기에 따른 수출중소기업 애로조사결과에 따르면,

○ 수출중소기업의 최근 애로사항은 원자재가격 상승(54.2%)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세계경제 불안 및 경기둔화(38.3%), 환율변동에 따른 경영난(37.4%), 관로개혁의 어려움(19.6%), 자금유동성 부족(13.1%)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원자재 가격안정 (52.9%)과 안정적 환율운용 (27.9%)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수출중소기업의 최소한의 채산성 유지를 위한 환율수준은 1달러당 1,157.6원, 1엔당 11.83원, 1



유로당 1,504.7원, 1위안당 167원으로 나타났다.

○ 최근 환율의 변동성 확대에 따른 정부의 역할로는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환율 조정(59.7%)이 외환시장 개입최소화(40.3%) 보다 높게 나타나, 수출 중소기업은 최근의 외환변동성 확대에 따른 영향을 크게 우려된다며 외환당국의 연착륙 유도를 희망하였다.

○ 최근의 고회율이 수출에 이익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수출중소기업의 60.3%가 환율인상이 수출에 이익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25.4%는 이익 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 이익이 되지 않는 이유는 환율인상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63.0), 환율인상에 따른 바이어 수출 단가 인하압력(22.2%), 글로벌경기둔화에 따른 수요감소(14.8%), 기존가입한 헤지상품손실(14.8%)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미국 일본 등 기존시장회복 및 중국 인도 등 이머징 마켓의 고속성장을 수출증대의 기회로 삼고, 해외 틈새시장의 판로 개척을 위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고 말하였다.

## 납품가 인하요구 혈값에 달라는 것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납품단가 인하는 부품을 혈값에 달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대기업들의 상생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 장관은 지난 달 28일 시

화공단에 위치한 전자부품 생산 업체와 반월공단 염색공장을 잇따라 방문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수출 대기업 위주로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재래 시장에서는 경기회복의 속도를 체감할 수 없다고 한다”며 “특히 납품 중소 협력업체들은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고 있는데도, 납품단가 인상은 커녕 인하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막말로 매년 5%씩 납품단가를 깎으려면, 10년이 지나면 거저 납품하라는 것 밖에 안된다”며 “매년 5%씩 깎으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고 법적으로도 못하게 돼 있지만, 계약을 서류로 안하고 구두로 하다보니 그런 게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고 인력과 판로 문제도 해결할 것”이라며 “공장 가동률이 높아지니 현장 인력 대책도 한 번 보겠다”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업종간, 기업규모간 체감하는 온도가 많이 다르다”며 “현장을 보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점검해보려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업체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대기업은 흑자가 나지만, 우리는 흑자 속 적자다”, “원자재 가격은 오르는데 납품 단가는 인하해 달라고 한다”, “외국인 고용도 쉽지 않고, 공고 졸업생은 아예 못구한다”, “에너지 비용이 많이 든다” 등 구체적인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 기준금리 동결 불구 인상압력 '여전'

지난달 0.25%포인트 전격 인상됐던 기준금리가 이달 동결됐다. 미국의 경기둔화 등 대외경제 불확실성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물가 불안우려가 커지는 점을 감안할 경우 3분기중 기준금리의 소폭 인상이 점쳐지고 있다.

□ 기준금리 동결 배경=최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현재 연 2.2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 금통위의 이날 금리동결은 부동산경기 침체, 가계 및 기업의 빚 부담 등을 고려할 때 두 달 연속 금리인상에 나서기 부담스럽고 미국의 경기 둔화가 세계 경제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을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는 지난 11일 미 경기의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이런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으며 중국의 7월 산업생산 증가율이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13.4%를 기록하는 등 미국과 함께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됐다.

특히, 국제 곡물가격이 치솟고 있으며 2~3개월의 시차를 두고 국내 소비자물가에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올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관리 목표치인 3%를 기록하고 내년 상반기 3.5%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금리 추가인상 가능성은 없나=인플레이션 압력 완화를 위해 이르면 다음달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시장의 분위기

○ 우선 한은 총재의 발언에서 물가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점과 국내 경제에 대한 판단이 긍정적이고 지난달 금리인상 이후 부정적 충격이 없었다는 점도 이같은 분위기를 뒷받침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황인성 연구위원은 “금통위가 미국, 중국의 경제 불안요인을 고려해 기준금리 동결에 나섰다. 그러나 다음 달 곡물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의 추세적인 상승세가 확인되고 미국 및 중국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 중기청, 상반기 중소기업 46조3000억 구매

2010년도 상반기에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제품을 46.3조원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에 따르면, 상반기 중소기업제품 구매규모 46.3조원\*은 올해 연간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77.2조원의 60% 수준으로서,

\* 물품 14.9조원(32.3%), 공사 26.5조원(57.3%), 용역 4.8조원(10.4%)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공공 구매를 통하여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토록 지원하기 위하여 금년 공공구매 예산 조기집행을 추진한 결과이다.

'10년도 상반기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기관유

형별로 살펴보면,

국가가관 및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6월까지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은 각각 8.8조원(진도율 67.5%) 및 16.5조원(진도율 59.6%)으로 상반기 계획(각각 8.7조원 및 16.2조원) 대비 각 100.9%, 102.2%를 달성하고,

지방자치단체는 6월까지 21.0조원의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여 상반기 계획(24.0조원) 대비 87.3%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올해 공사용자재 구매실적이 크게 증가한 것은 작년의 제도 개선\*에 이어 금년부터 공공기관들의 직접구매 이행여부를 중점 관리하고, 직접구매 실적을 제출\*\*토록 함으로써 공공기관들의 제도 준수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데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10년 상반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적]**

(단위 : 조원, %)

| 구 분    | '10 계획 (A) | '10 상반기 (6월) |       |          | 진도율(C/A) |
|--------|------------|--------------|-------|----------|----------|
|        |            | 계획(A)        | 실적(C) | 집행률(C/B) |          |
| 계      | 77.2       | 48.9         | 46.0  | 94.6     | 60.0     |
| 국가가관   | 13.1       | 8.7          | 8.8   | 100.9    | 67.5     |
| 지방자치단체 | 36.4       | 24.0         | 21.0  | 87.3     | 57.6     |
| 공공기관   | 27.7       | 16.2         | 16.5  | 102.2    | 59.6     |

한편, 올해부터 집계를 시작한 공사용자재의 상반기 구매실적은 6.2조원으로, 조달청 실적을 기준으로 볼 때 '09년 1년간 실적 6.5조원의 85%인 5.5조원을 상반기 중 구매하여 올해 연말까지는 10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 조달청 구매실적 추이 : ('08)4.9조원 → ('09)6.5조원 → ('10.상)5.5조원

기관별로 보면, 조달청을 통한 구매가 가장 많고(5.5조원), 공기업 중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1,261억원), 한국전력공사(971억원), 한국도로공사(471억원), 한국농어촌공사(332억원) 순으로 구매실적이

\* 직접구매 예외사유 : (종전) 자재의 수요·공급 상황이나 공사현장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직접구매를 이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개정)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직접구매가 곤란하다고 협의한 경우

\*\* 실적 제출 대상 : 전년기준 공사규모 1천억원 이상인 공공기관('09년 54개)

• 54개 공공기관의 공사실적은 전체(73조 5,552억원)의 약 95%를 차지

중소기업청은 하반기에도 아직 경기회복 효과가 충분히 미치지 않고 있는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하여 매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실적을 점검하고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에 점검결과를 보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지속 독려해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공공구매지원관리자로 하여금 제도 이행을 중점적으로 점검토록 할 방침이다.

(문의 : 공공구매관료과 김명균 042-481-4468)

## 대기업, 中企 상생방안 '붓물'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대기업을 상대로 협력업체와의 상생경영을 거듭 주문하고 나선 이후 주요 대기업들이 고심하며 마련해온 상생방안의 윤곽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무늬만 상생협력이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동반자 관계로 상향돼야 한다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다.

지금까지 공개된 대기업의 상생방안은 대체로 2·3차 협력사에 대한 배려와 이익 배분 강화 및 협력사의 성장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 ■ 자금지원 강화

- LG그룹은 지난 12일 중소기업사와의 동반 성장을 위한 5대 전략과제를 제시하고 협력업체와의 공존 경영을 선포했다.

이번 발표에는 은행과 연계하지 않고 직접 대출해 주는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협력사에 연간 7천4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 방안을 포

합했다.

LG는 2·3차 협력사들도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연간 2천500억원 규모의 'LG 상생협력펀드'를 다음 달에 선보일 예정이다.

현대기아차그룹도 2·3차 협력사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의지를 표명했다. 현대기아차는 지난 10일 주요 원자재인 철판을 일괄 구입해 협력사에 구매가격으로 공급하는 '사급제도'의 대상을 기존 1차 협력사에서 2·3차 협력사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3차 협력사들이 현대기아차의 철판 공급가를 기준으로 납품가격을 인정받으면 원자재 가격 인상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 ■ 이익공유 앞장

- 대기업들이 거둔 막대한 이익이 중소기업에게 까지 공정하게 배분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상생 대책에 반영되고 있다.

포스코는 원가절감액을 협력사와 나누는 '베네프트 셰어링(Benefit Sharing) 제도'를 전체 협력업체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베네프트 셰어링은 협력업체가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원가를 절감한 경우 그 성과를 협력사와 나눠 갖는 것으로, 포스코는 2004년 1차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

### ■ 협력업체 경쟁력 강화

- 현대기아차는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자립형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중소기업이 품질을 향상하고 기술개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대기아차는 연구개발비 등 직접 지원금 2천300여억원과 기금 출연을

통한 간접지원금 9천200여억원 등 총 1조1천544억원의 지원기금을 조성키로 했다.

LG는 협력사와 손잡고 녹색 신사업을 공동 발굴할 계획이다. 태양전지와 LED, 전기차 배터리 등 녹색 신사업 분야에서 중소기업에 연구개발 용역을 발주하면서 2011년부터 5년간 1천억원을 연구개발에 활용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SK, 롯데, GS, 금호아시아나, 한진 등 다른 대기업 그룹들도 그동안 추진해온 상생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방안을 잇따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 중소기업계 반응 ‘시큰둥’

- 대기업의 연이은 상생협력방안 마련에도 중소기업계 반응은 냉담하다.

지난 2~3년 새 급증한 대기업들의 상생협력 협약 체결이 중소기업들의 ‘납품단가 연동제’ 요구를 희

석시키기 위한 방안이라는 시각이 우세하기 때문.

이번에 내놓는 방안 또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이후 우후죽순 격으로 발표되고 있어 또다른 물타기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대기업의 이번 상생협력방안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상생협력 결과가 대기업 내부 성과평가에 반영돼야 한다”며 “납품단가 인하 실적 등이 해당직원 성과로 평가되는 현재와 같은 시스템에서는 어떠한 방안도 실효성 갖기 어렵다”고 지적했다